광주·전남 배전노동자 "한전 협력사 불법하도급 만연" 고발

노조 "지역내 불법하도급 비율 58% 달한다" 고발장 접수
한국전력 측 "전수 조사선 의심 사례 없었다…사실 무근"

40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 배전 노동자들이 한국전력 협력업체 내 만연한 불법 하도급 실태를 폭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한국 전력은 이미 불법 편법 하도급 실체를 알고 있다. 한전이 협력회사들의 불법 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전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조 자체 조사 자료를 근거로 "광주·전남 지역 불법 하도급 비율은 58%이며 하도급 공사 금액 원가는 65%가량이다"며 "광주·전남 지역 업체 중 절반 가까이가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 전기 업체는 낙찰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직원들을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하청업체가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등 전기공사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 불법 하도급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일하는 죄 없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이윤을 착취하는 불법 하도급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불법 하도급에 있다.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배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회견을 마친 노조는 광주경찰청 민원실에 불법 하도급 연루 의혹이 있는 지역 내 전기공사업체 A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는 임금·노동 조건 개선, 하계 유급 휴가 3일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이날로 총파업 40일째를 맞았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내 배전전문회사 67곳에 대해 인원·장비 등 현장 전수 조사를 벌였으나, 불법 하도급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노조가 주장한 한전 사장 대국민 담화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과거 사법기관에 적발된 불법 하도급 업체 행태를 분석한 내부 보고서를 인용, 노조가 편파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최이슬 기자

'시간당 71㎜ 집중호우' 전남지역 침수 피해 잇따라

집중 호우로 주택·도로 침수

전남 지역에 시간당 최고 71.1㎜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18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분~4시5분 진도의 시간당 강수량은 71.1㎜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4시5분부터 5시5분 사이 영암 학산에는 63㎜의 호우가 쏟아졌다. 오전 3시58분부터 4시58분 사이 해남에도 48㎜의 비가 내렸다.

오후 3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고흥 포두 134㎜, 진도 126.5㎜, 영암 120㎜, 신안 119.5㎜, 여수 116.8㎜, 보성 111.5㎜, 해남 102.9㎜, 광주 48.7㎜ 등을 기록했다.

집중 호우로 주택과 도로 침수가 이어졌다.

오전 9시44분과 오전 9시께 영암군 삼호읍 사거리와 화순군 화순읍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겼다가 복구됐다. 오전 8시49분 순천시 별량면 주택과 오전 3시45분 목포시 산정동 주택 마당에 물이 차올라 소방 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오전 8시40분 보성군 조성면 도로에 토사가 흘러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

교통 차질도 일부 빚어졌다. 침수 우려로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 주변 4차로 통행이 오전 9시부터 전면 통제됐다 오후 2시에 해제됐다.

여수공항에서는 김포를 오가는 항공편 2대 운항이 결항됐다. 목포~가거도, 여수~거문도, 완도~여서도를 오가는 배편도 중단됐다. 전남 각 지자체는 배 300척을 항구 주변 안전 지대로 옮겼고, 80척을 결박시켰다.

광주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광주·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호우 특보는 해제됐으나 19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시설물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환 기자

집주소 착각 만취 40대…"우리 집에 왜 있느냐"며 주민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입건

술에 취해 아파트 이웃주민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5분께 군산 시내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60대)씨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로 귀가한 A씨는 B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우리 집인데 왜 여기 있느냐"며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여러 차례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복도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고시원 등 숙박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 3만에 종료…설치율 97.3%

1513개소 중 1472곳 설치·41곳 미설치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약 3년 만에 종료됐다. 설치율은 97.3%를 기록했다.

소방청이 18일 내놓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설치 대상 총 1513개소 가운데 1472개소(97.3%)가 완료됐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곳은 41개소(2.7%)다.

다만 현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진행중인 곳이 있어 설치율은 소폭 증가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미설치 대상 중 25개소의 경우 조치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앞서 주거 취약계층 및 재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 등에 국가와 지자체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2019년 8월 시작했다. 약 3년간국비예산 84억2000만원 중 64억5000만원(76.6%)이 집행됐다.

사업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는 게 소방청 측 설명이다. 사업 시행 전인 2016~2018년 고시원 화재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3명이었는데, 2019~2022년 6월까지 연평균 사망자 수는 0.75명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고시원 화재의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고시원 소방특별조사, 화재위험평가, 간이헤드 표본조사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시설 점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체제개선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 및 안전체계 확립 등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거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해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